

- 약속어음 : 어음법에 의한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함.
- 기 타 : 원·부자재 사급분 상계처리 등

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현황

구분	60일 이내	61일~90일	91일~120일	121일 이상	합계(비중)
2003년	63.3	27.3	8.6	0.8	100%
2004년	33.1	37.9	21.0	8.0	100%
2005년	36.7	35.4	25.2	2.7	100%

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협력중소기업들의 평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2004년 기준 조사응답 31.2%가 주거래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24.9%만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31.5%는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.

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체감 평가

구분	매우 불공정	불공정한편	보통	공정한편	매우 공정한편	잘모르겠다	합계(비중)
2005년	7.1	17.8	43.6	26.2	5.3	-	100%

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사항으로는 '매년 단가인하'가 32.2%,(2004년도 46.1%), 납기일 촉박 19.0%,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18.0%, 원사업자의 발주취소·변경 14.7% 등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'04년도 46.1%에서 '05년도에는 32.2%, 하도급대금 60일 초과 지연지급(7.4%), 할인료 미지급(5.6%)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정부, 업계의 자율적 상생협력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(※복수응답)

구분	2004년	2005년
①하도급 대금 60일 초과	13.0(15)	7.4(29)
②어음할인료, 지연이자 미지급	11.3(13)	5.6(22)
③매년 단가 인하(CR)요구	46.1(53)	32.2(127)
④원사업자 발주취소, 변경	22.6(26)	14.7(58)
⑤검사 결과 미통보	3.5(4)	-
⑥계약서 미교부	2.6(3)	1.0(4)
⑦지나친 품질수준요구	-	18.0(71)
⑧관계기관 신고로 보복조치(향응/금품요구)	0.9(1)	2.0(8)
⑨납기일 촉박	-	19.0(75)
합계(응답수)	100%(115)	100%(394)

- 주) 1. 2006. 4월 현재 : 조사응답 1%개 업체의 복수응답
- 2. ⑧번항은 2005년도에는 “향응/금품요구 사항”으로 설문조사함.

한편,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주된 이유는 조사응답 199개 업체가 우선 대기업의 비용 상승분 전가(38.5%)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불가피(24.0%),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(19.1%)등을 지적하였다.

대기업 단가인하 요구의 주된 원인(※복수응답)

① 대기업 임금인상 전가	② 대기업 원자재상 승분전가	③ 대기업 환차손 전가	④ 대기업 자금사정 악화	⑤ 현금비중 확대 (어음만 기일단축)	⑥ 납품 물량증가	⑦ 치열한 가격경쟁 (가격인하 불가피)	⑧ 생산성 향상(원가 절감)	⑨ 기타	합계 (응답수)
10.2 (48)	17.0 (80)	11.3 (53)	4.5 (21)	1.3 (6)	11.5 (54)	24.0 (113)	19.1 (90)	1.3 (6)	100% (471)

- 주) 1. 2006. 4월 현재 : 조사응답 199개 업체의 복수응답
- 2. 기타 : 일방적인 임의적용(중국과 비교견적, 10년전 임률적용)

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대처방안으로 '자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' 35.3%, '운영비 절감' 29.1%로 조사되었다. 그러나 1차 협력중소기업이 2차 협력중소기업에게 단가인하를 요구(8.7%)하거나 기술개발비·시설개체비 축소(8.3%)등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는 결국 2차 협력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며 1차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.

따라서 대·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및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성과공유와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우선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① 직원 임금 삭감	② 시설개체, 기술개발 투자비감축	③ 2차 벤더에 단가인하 요구	④ 운영비 절감	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	⑥ 그냥 적자 운영	⑦ 대기업에 물량 증대 요구	합계 (응답수)
1.7 (8)	8.3 (40)	8.7 (42)	29.1 (141)	35.3 (171)	9.3 (45)	7.6 (37)	100% (484)

- 주) 2006. 4월 현재 : 조사응답 203개 업체의 복수응답

최근 환율하락과 관련하여 조사응답 95개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첫째, 대기업의 환차손 비용전가를 위한 일방적 단가인하(59.7%)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금결제 기일 장기화를 지적함.

원화절상, 유가·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협력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와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원/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(※복수응답)

① 환차손 비용전가를 위해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	② 원화 결제를 달러 결제로 일방적으로 변경	③ 대금 결제기일 장기화	④ 어음할인료, 지연이자 등 미지급	합계 (응답수)
59.7 (74)	10.5 (13)	16.1 (20)	13.7 (17)	100% (124)

- 주) 2006. 4월 현재 : 조사응답 95개 업체의 복수응답

대·중소기업간 협력관계는 중소기업의 43.1%가 과거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양적,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20.0%로

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양적, 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, 대기업, 중소기업간 3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대·중소기업 협력관계 과거 비교

① 양적, 질적으로 매우 좋아짐	②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내용은 큰 변동없음	③ 과거와 양적으로 변동없음	④ 과거보다 양적, 질적으로 나빠짐	합계
20.0 (45)	43.1 (97)	22.7 (51)	14.2 (32)	100% (225)

- 주) 2006. 4월 현재 225개 업체가 응답

대·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응답 212개 업체가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·벌칙 강화, 언론공표 등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51.2%, 그 다음으로 모범대기업에 대한 금융·세제 인센티브 강화 23.3%, 대기업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15.2%로 조사되었다.

대·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구축방안(※복수응답)

① 정부의 직권 조사를 확대·강화	② 법위반 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	③ 불공정한 기업에 대한 언론 공표	④ 임직원에 대한 하도급법, 윤리교육 등 강화	⑤ 모범 기업에 대한 표창 확대	⑥ 무범기업에 대한 금융·세제 인센티브 확대	합계 (응답수)
16.3 (73)	18.8 (84)	16.1 (72)	15.2 (68)	10.3 (46)	23.3 (104)	100% (447)

- 주) 2006. 4월 현재 : 조사응답 212개 업체의 복수응답



[주대등판지]

박환주 차장 → 부장

[주동진판지]

오수진 생산관리부 과장 → 차장

이현주 경리부 과장 → 차장

[주미광판지]

정승진 기사 → 과장

현승호 기사 → 과장

신진수출포장

제해성 부장 → 이사

정치만 차장 → 부장

오성판지(주)

이상길 관리부장 입사

화성포장산업(주)

유병운 전무이사 입사

